

화재 안전성·국내산 소재 등 ‘非가격 요소’ 승부처 부상

2차 ESS 중앙계약 경쟁입찰

기술·안전 중심 평가기준 강화
배터리3社, 국제인증 등 맞춤 대응
이달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제2차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 최종 심사에 최소 1명의 화재 전문가 참여가 의무화되면서 이번 입찰 결과가 화재 안전성 확보 수준과 국내 산업 기여도, 국내산 소재 활용 비중 등 비가격 요소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평가 기준 전반에서 안전성과 기술 완성도의 비중이 한층 높아지며 입찰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배터리 3사가 경쟁하는 국내 ESS 중앙계약시장 2차 경쟁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설 연휴 이전, 늦어도 2월 말까지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입



LG에너지솔루션 ESS 전력망 컨테이너 제품

찰 규모는 총 540MW로, 거의 1조원 수준에 달해 2차 결과를 앞두고 업계 전반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2차 입찰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화재·설비 안전성 평가의 강화다. 전력거래소는 국내 ESS 중앙계약시장 2차 경쟁입찰에서 안전성 강화 기조에 맞춰 심사위원회 구성 방식을 손질하고, 평가 과정에 화재 안전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차 경쟁입

찰 평가위원회에는 화재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1차 입찰에서 평가위원 구성이 무작위로 이뤄지며 화재 전문가 참여 여부가 달라졌던 구조에서 벗어나, 안전성 평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평가 항목과 배점 구조 역시 안전성 중심으로 조정됐다.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는 비가격 평가 비중이

확대되면서 화재 안전성 점수가 기존 6점에서 11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내 산업 기여도와 국내산 소재 활용 비중도 주요 평가 항목으로 반영되며, 기술과 안전성을 중심으로 한 변별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배터리 기업들은 화재 안전성과 시스템 완성도를 전면에 내세운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UL 9540A(열폭주 시험 표준) 기준을 충족한 데 이어 국내 업체 최초로 대형 화재 모의시험(LSFT)을 통과하며 시스템 단위 화재 안전성을 검증했다. 여기에 북미 ESS 시장에서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잇달아 확보하며 실증 경험과 운영 트랙레코드를 쌓고 있다는 점도 국내 평가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차 입찰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삼성SDI는 각형 배터리 폼팩터를 기반으로 모듈 내장형 직분사(EDI)와 열 확산 방지

(No-TP) 기술 등을 적용해 차별화된 안전성 강화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SK온은 최근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과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ESS 화재 안전 기술과 신규 소재 검증을 병행하고 있으며 전기안전연구원의 에너지저장연구센터 인프라를 활용해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 기반 진단 시스템과 액침 냉각 등 차세대 안전 기술에 대한 검증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평가 기준이 기술력과 안전성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이번 입찰 결과를 두고 업계 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서는 기업들이 가격을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최종적인 변별력은 화재 안전성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등 비가격 요소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북미 배터리시장 주도권 경쟁 격화

전기차 부진에 ESS 무게 중심 이동
K-기업, 中 공세·완성차 가세 ‘이중고’

전기차 수요 부진이 이어지면서 북미 배터리 시장의 무게중심이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옮겨가는 가운데 중국산 LFP 배터리의 가격 공세와 테슬라·포드 등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현지 생산 가세로 배터리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북미 시장 입지를 둘러싼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북미 전력망 안정화 수요와 데이터센터 증설이 맞물리면서 올해 글로벌 ESS 설치량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둔화로 가동률 부담이 커진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북미 현지 생산을 기반으로 ESS 사업 비중을 확대하며 돌고구를 모색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 등 북미 현지 공장을 중심으로 전력망·데이터센터용 ESS 배터리 생산을 확대하며 수주 레퍼런스를 쌓고 있다. 북미 생산 비중을 높여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셀·시스템 단위 안전성 검증을 앞세워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삼성SDI 역시 ESS 전용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형 LFP 배터리를 적용한 SB B 2.0을 미국에서 생산해 현지 ESS 프로젝트 대응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SK온도 미국 조지아 공장의 일부 생산 라인을 ESS용 LFP 배터리로 전환해 북미 ESS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글로벌 기준 ESS용 리튬이온 배터리 출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과 공급 경험 면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완성차 업체들까지 ESS 시장에 가세하며 경쟁 구도는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ESS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 단기적인 방어선이자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재정립할 수 있는 핵심 전장”이라며 “현지 생산을 통한 비용 절감과 안전성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임광현 “정책 일관성 중요… 이제 정상화”

〈국세청장〉

》 1면 ‘양도소득세 이어…’서 계속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올해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할 시 세 부담이 최대 2.7배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세 부담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주택 양도가액이 20억 원이고 양도차익이 10억 원인 경우, 현행 양도세 중과 배제 조건에서는 세 부담이 2억6000만 원이다. 하지만

중과가 적용되면 2주택자는 세 부담이 3억3000만 원, 3주택자는 4억2000만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청장은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됐던 2021년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9000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1000건,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만5000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고양시 공고 제2026 - 330호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등) 해제]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6. 2. 6.

고양시



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k㎡)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고양시 전역	112.784	감0.023	112.761	

※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23-123호(2023. 4. 28.)에 따른 면적임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계		22,74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규정에 따라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함
	1	덕양구 대자동 134-26번지 일원	4,407	
	2	덕양구 대자동 139-8번지 일원	200	
	3	덕양구 대자동 334-1번지 일원	8,065	
	4	일산동구 백석동 459번지 일원	9,6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 규정에 따라 경계선 관통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함
	5	덕양구 내곡동 485-15번지	439	

가. 관계도서 : 게재생략 (공람 장소 비치)

나. 공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2. 6.(금) ~ 2026. 2. 20.(금) (15일간)

다. 공람 장소

○ 고양시청(도시계획정책관), 덕양구청(건축과), 일산동구청(건축과)

○ 고양동, 장항1동, 능곡동 행정복지센터

라. 의견제출 :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반드시 공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람(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031-8075-30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